2013 지방 7급

지방직 7급

이동호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베리타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10월 5일) 지방직 7급 시험 문제

01.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관료제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 ②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③ 능률성보다는 문제해결을 필수적 가치로 추구한다.
-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설 ②

②는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개인 능력보다는 조직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02.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 ③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③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배분(분배)정책에 해당한다.

03. 베버(M.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관료는 'Sine ira et studio'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관료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에게 계층적 책임을 져야한다. 행정책임의 대상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행정부에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나 관료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될 수 있다. 즉, 관료의 입장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자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번 지문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을 답으로 고르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Sine ira et studio'는 라틴어로서 타키투스가 한 말이다. '분노와 편견 없이' 이런 뜻이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료제의 특징 중 impersonality, rationality를 생각하면 된다.

04.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 ① 특별회계
- ② 목적세
- ③ 계속비

④ 수입대체경비

해설 ③

계속비는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한정성(시간적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통일성에 대한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다.

05. 롤스(J.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 ③ 차등의 원리
-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해설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가 아니라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가 맞는 표현이다.

06.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부채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 ②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 ③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④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해설 ①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수입·지출에 대한 것은 현금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07.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회계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다.
-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가 있다.

해설 ②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의 일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특별회계의 일례에 해당한다.

08.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해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주어진 것(외생적 선호)으로 본다.

09.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 ② 일선관료들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진다.
- ③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④ 일선관료들의 재량권이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된다.

해설 ④

일선관료들은 행정고객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재량성과 상황성에 놓여져 있다. 일선관료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10. 신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②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④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해설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설명이다.

11.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 정부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연성·창의성·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 ④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해설 ④

스마트 정부에서는 재난 발생 후가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12.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 ② 주민의 감사 청구
- ③ 주민총회
- ④ 주민소송

해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주민총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13.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 ②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 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유형에 속한다.
- ③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해설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프로슈머(prosumer)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14.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작업집단의 팀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한다.
- ④ 피평가자를 업무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급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해설 ③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시킨 것은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에서의 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에서는 평정단을 상급자, 동료, 하급자 및 민원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15. 정부실패 및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내부성 문제는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실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뉴거버넌스적 접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중시한다.
-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해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16.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용 또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 ② 관료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
-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압력단체들의 개입 때문에 성과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어렵다.
- ④ 업무수행과 성과 사이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많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설 ①

관리대상자들이 오히려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17.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조직의 불법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구성원을 보호한다.
- ③ 옴부즈만(ombudsman) - 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준다.
- ④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해설 ④

공직자 윤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하는 제도이다.

18. 직위분류제 분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ㄴ.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수준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 ㄷ.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ㄹ.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

	ㄱ	ㄴ	ㄷ	ㄹ
① 직위	등급	직류	직군	
② 직렬	등급	직군	직류	
③ 직위	직급	직류	직군	
④ 직렬	직급	직군	직류	

해설 ①

ㄱ은 직위, ㄴ은 등급, ㄷ은 직류, ㄹ은 직군에 해당한다.

19. 하이예스(M.Hayes)는 정책결정 상황을 참여자들 간 목표 합의여부, 수단적 지식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목표 갈등	목표 합의
수단적 지식 갈등	I	II
수단적 지식 합의	III	IV

- ① 상황 I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며, 점증적이지 않은 대안은 입법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 ② 상황 II에서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 ③ 상황 III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상황 IV에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설 ③

논리적으로 유추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IV의 경우 목표가 합의가 되어 있고, 수단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기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III이 아니라 IV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④또한 합리모형의 경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지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문이다. ③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강사가 항상 이야기 하는 거지만, 하이예스(M.Hayes)라는 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내용에서 유추를 하면 된다.

	목표의 갈등	목표의 합의
수단적 지식의 갈등	정상적 점증주의의 영역	순수한 지식기반의 문제
수단적 지식의 합의	순수한 가치갈등의 문제	합리적 의사결정의 영역

(남궁근)

20. 대표관료제 이론이 상정하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를 민주화 하는 데 기여한다.
- ㄴ.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 ㄷ.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 ㄹ.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 ㅁ.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해설 ②

ㄴ.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이다.
 ㄹ.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